

# “자사고 취소는 부당” 대법원 판결에 진보교육감 멘붕

대법원, 서울시교육감 청구 기각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부 권한

교육청 “판결의 과잉 해석 경계…  
지정취소 등 전권 달라” 거듭 요청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당시 교육부의 직권취소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 당사자인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과잉 해석을 경계한다”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등의 전권을 시·도교육청에 위임해달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교육부도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각 시·도교육청에 이관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한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고 패소를 선고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4년 10월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교육부가 교육감의 재량권을 넘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 /이범중 기자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교육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장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

교육감이 주무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시·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13 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도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각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판결로 2014년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은 자사고 평가에 있어 교육청 권한을 제한하고자 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전제로 자사고 평가를 진행하고자 했던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입장 차이에서 이루어진 쟁송

에 대한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의 동의권을 없애고, 이에 관한 전권을 교육청에 이양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혹여 이번 판결이 자사고 폐지를 대법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과잉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특히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교육청이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등에 대한) 권한 배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사고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사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폐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이범중 기자 hys@metroseoul.co.kr

## 삼바 분식회계 ‘고의’ 판단 임원 해임권고·검찰 고발

증선위 5차 심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5차 심의 끝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또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한 행위를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기준 변경 건에 대해선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다며 행정처분의 명확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지배권 변동에 관한 지적사항은 조치원안을 가지고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증선위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안건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을 필요하다”며 “금감원이 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한 뒤 조치안을 추가로 내면 다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soul91@

윤석현 금감원장, 첫 타깃은 증권사?

## “내부통제 강화… 혁신성장 발 벗고 나서야”

증권사 CEO 간담회 개최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만남으로 업계 회동을 시작했다.

윤 원장이 취임한 이후 첫 대면이지만 최근 배당사고와 공모도 주식에 대한 결재불이행 사태 등이 있었던 만큼 내부통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질타와 함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CEO 간담회’를 열고 “최근 증권업계에서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증권업계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자본시장에 요구하는 첫 번째 과제는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내부통제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금융회사 스스로 관심과 책임의식을 갖고 내부통제를 조직문화로 체화하는 데 달려있다”며 “CEO를 비롯해 조직내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역시 “금융통제시스템 사건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이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 및 증권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업계 스스로도 몇 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32개 증권사 CEO가 참석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 가운데서는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증권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시작부터 일반투자자와 스타트업, 취업준비생, 증권사 직원 등이 증권업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담은 영상물을 상영했다.

윤 원장은 “창업 초기에 자금조달을 하지 못해 3년 이내 도산하는 기업의 비율이 62%에 달할 정도로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며 “

자본시장과 증권업계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년일자리 창출도 촉구했다.

그는 “증권업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디지털 금융전문가의 채용과 육성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타 업권에서 지지부진한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력도 필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경총 신입 부회장에 김용근 車산업협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김용근(62)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사진)을 신입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전경위원회를 열고 김용근 자동차협회장을 해임된 송영중 전 부회장을 있는 새 부회장으로 뽑았다.

이번에 새 부회장으로 선출된 김용근 자동차협회장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차관보), 한국산업기술재단 이사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등을 지냈으며 2013년부터 자동차협회를 이끌었다.

앞서 경총은 지난 3일 임시총회에서 전



임인 송영중 부회장을 파행적 사무국운영, 경제단체 정체성에 반하는 행위 등을 사유로 해임했다. 회의를 마친 손경식 회장은 김용근 회장에 대해 “경력이 많고 경제·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총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이끌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LH, 인도 스마트시티 사업 교두보 확보

뭄바이에 대표 사무소 개소

LH가 지난 10일 국내 건설 공기업 최초로 뭄바이에 LH 인도 대표 사무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엔 박상우 LH사장을 비롯해 주인도 뭄바이 총영사, 인도 마하라쉬트라주(주) 정부 차관 및 갈리안-뎀비블리시(시) 시장 등 3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LH는 이번 인도 대표사무소 개소로 인도의 건설시장 및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시장조사와 현지 개발관련 법규 및 제

도 등의 정보 수집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도 100대 스마트시티 사업’의 안정적 진입을 꾀하고 향후 국내 민간 건설업체들의 인도 시장 동반 진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도 100대 스마트시티 정책’은 지난 2014년 5월 출범한 인도 모디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올해 4월 기준 100개의 스마트시티가 인도 전역에 지정됐다.

이에 LH는 한국-인도 간 도시 인프라 개발사업 전반의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인도의 경제·물류 중심부인 뭄바이가 위치



지난 10일 LH 인도 대표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왼쪽 세번째부터) 박상우 LH 사장, 김성은 주뭄바이 총영사, (왼쪽 두번째) Bhushan Gagrani 마하라쉬트라주 차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

한 마하라쉬트라주를 우선 참여 검토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채신화기자 csh9101@